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
8
제64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32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

제385회 임시회 개회



03

긴급 현안질문



04/07

주요 이슈



10/11

함께 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바람과 파도에 몸을 싣고 구좌읍 김녕리. 파란 하늘엔 흰 구름이 달려가고, 바다엔 저마다 띄운 카이트가 바람의 길을 타고 있다.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를 따라 제주의 여름이 깊어간다.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 제주도 제2회 추경안 가결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28일 오후 제 38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제 2회 추경안을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올해 제주도 예산은 기정 예산 6조 538억원보다 975억원 (1.61%) 증액된 총 6조 1513억 규모로 확정됐다.

도의회는 문화예술지원사업과 제 59회 탐라문화제, 칠십리 축제 행사 운영 등에 70억원을 증액했으나, 도 인건비 53억원, 도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1억 2000만원 등 128억원을 감액했다.

이날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특위 위원은 강성민·고은실·박호형·송영훈·양병우·오대익·한영진 의원이 선임됐다. 또 의회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좌남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 대응이라던 이번 추경은 도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며, “추경심사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난 도의 재정운용 부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향후 재정위기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제도개선 통해 경기 부양해야” 좌남수 의장, 제주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개회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환경·추자면)은 7월 16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코로나 대응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심사를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과 관련해 좌 의장은 “도민 사회에 이해를 구하지 않아 안타깝다. 도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좌 의장은 이날 열린 제3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의 개회사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안전·경제방역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정착 코로나 대응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비중을 감안할 때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관광분야는 오히려 감액 편성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2750억원에 달하는 세출 효율화 예산이 필요해 역대 유래 없이 조정된 이번 추경안이 과연 코로나 극복을 예산편성인지 각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좌 의장은 이어 “코로나 경제위기 충격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중단됐던 (제주도-의회)상설정책협의회도 정상화시켜 경제위기 극복과 도정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



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는 기존 13명의 예결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으로 확대했다.

예결특위, 제2회 추경 128억 감액 조정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 등 70억 증액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28억이 감액 조정됐다. 지속적인 불용률이 지적된 인건비 등이 삭감돼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증액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진행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27일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조538억원 보다 975억원(1.61%) 증액된 총 6조547.75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 위기극복으로 문화예술 활성

화 지원사업, 제59회 탐라문화제 개최, 칠십리 축제 행사 운영 등에 총 70억원을 증액했다.

최근 3년간 과다계상된 추계로 불용되는 예산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인건비(일반회계 불용율 2017년 9.6%, 2018년 10.3%, 2019년 7.2%로)는 계수조정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한 53억원을 대폭 감액했다.

이 밖에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국외여비 전액을 자진해 삭감하는 등 총 128억을 감액 조정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28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됐다.

5분 발언

“유니버설디자인 공약 실천 의지 어디에” 김경미 의원



환경 개선' 공약 실천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7월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제11대 의회에 입성해 2018년 7월 첫 5분 발언을 한 후 다시 2년 만에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요되는 차별적인 삶에 대한 저의 일상을 지금처럼 42명의 의원과 구별되는 단상에서 발언을 했다.”며 운을 뗐다.

김 의원은 “행정부지사 직속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신설하고, 디자인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등 지사의 유니버설디자인의 의지가 확고함에 기대를 많이 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도시건설국 안에 흡수되는 조직 개편안이 제출되는 상황을 보면서 공약 실천 의지가 있는지 되묻게 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저는 오늘이 42명과 분리된 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면서, “민선 7기 앞으로 2년이나 남았다. 2년 동안 준비하고, 대비했던 것들에 대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새롭게 정비하고, 민선 6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모두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제주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가 분리와 배제의 공간을 없애고 모두가 편한 발언대를 계획하면서 향후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민선 6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모두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제주를 만들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 내실있고 발빠른 도정 대응 주문” 이승아 의원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는 극심한 경기 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며, “문제는 시기”라고 운을 뗐다.

그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은 이미 주민들께 구체적인 로드맵(이행안) 설명을 마쳤고, 제주와 여건이 비슷한 전라북도 역시 관련 보고대회까지 마

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 지사에게 제주형 뉴딜 계획을 준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은 그동안 제주가 강점으로 제시했던 부분으로 잠재능력도 충분하다.”며, “또 현 시점은 안전관광, 공정관광으로 제주 관광의 질을 개선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불안을 안겨드릴지, 아니면 희망의 믿음을 줄 수 있을지는 지사의 행보에 달려 있다. 지사께서 그토록 원하는 대권의 목적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지,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한 대권 정치의 첫 단추를 제주에서 잘 채우시되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대권을 향해 순항할 수 있는 도전자가 되시라”고 충고했다.

긴급현안질문

홍명환 의원, 도내 공공기관장 낙하산·보은인사 성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7월 28일 속개된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최근 이뤄지고 있는 도내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 '낙하산·보은·회전문 인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홍 의원은 "원 지사는 (동영상) 이철희 전 의원 '타짜'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대리운전 음주사고에 있어 김태엽 시장이 옆집에서 세웠다 자기집으로 옮겼다고 했다."며, "(김 시장이) 180m 갔다는 데 그게 옆집이냐."고 캐물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실질적으로 그랬다. 그게 팩트다. 그러나 현장은 가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문관영 경제통상진흥원장,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홍균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현창행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며 "바로 선거공신들이다. 전문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특히 문 경제통상진흥원장은 옛 한나라당 사무처장 했던 분으로 경제분야 전문성이 전혀 결여된 분"이라고 꼬집었다.

강민숙 의원 "예술인들 눈물 호소 도정은 안들리나"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2200억원 상당의 필수경비가 (본예산에)편성되지 못했다."면서, "이를 메꾸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민간보조금을 다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확장재정을 명분으로 잘못된 재정정책을 펼쳤다"면서 "이를 메꾸기 위한 무리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대응 추경지연과 민생경제 정책 부재하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원 지사는 "(강 의원이)단정짓고 도정 지출 삭감이나 코로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적인 말씀을 한다."

며 강 의원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예술인들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의회 오셔서 가정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며 눈물로 호소했다."며, "도민들 어렵다고 얘기 하고 그분들 살림살이 챙겨보셨나. 밖으로(서울로) 나가기 바쁘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강성민 의원 "원희룡 지사는 4·3특별법 발의에 무엇 했나"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명만이 서명을 한 사항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면서 미래통합당 대권 유

력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중재능력 부족을 거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민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안에 (미래통합당 의원의 서명은) 상당히 부족했다."며, "이번 발의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며 따져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발의 과정부터 같이해

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재부를 넘는 것"이라며 정부의 설득작업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원 지사께서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만날 당시 제주 4·3에 대해 이야기는 없었다."며, "원내 대표와도 (제주 4·3과 관련한)이야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혁신기획단, 제1차 회의
향후 일정 및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마련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회혁신기획단장은 7월 16일 오전 10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일정과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제주도의회혁신기획단은 먼저 7월 중으로 도의회의원 대상 1차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조직진단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순차적으로 8월까지 혁신속도와 범위를 정해 시기별(장기 중기 단기)로 혁신안을 도출하고 고문 및 자문단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혁신안 중 우선 처리 가능한 세

부과제는 조례 및 규칙 개정안과 결의안 등을 마련해 9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홍명환 단장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의회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의회가 중심을 잡고 더 일하는 의회 더 전문적인 의회 더 효율적이고 더 공정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의회혁신기획단 의장단으로 좌남수 의장 정민구 강연호 부의장을 선임하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을 고문으로 위촉한 도의회 의회혁신기획단



은 이날 자문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문경운 송영훈 의원 미래통합당 김황국 의원 미래제주 부공남 의원을 추가 선임했다.

도의원 인사청탁·성희롱·사적노무 요구 등 금지
좌남수 의장, 의회 혁신 제1호 조례 대표발의

제11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의회혁신기획단 제1호 조례안으로 인사청탁·인사개입·성희롱·사적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도의원 윤리조례가 신호탄을 쏘았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9월 임시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도의원 윤리조례에는 △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 △의회 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할 이유 없이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 △성적 언

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그 밖에 법령 및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행위 등을 역시 직권남용의 구체적 유형에 포함시켰다.

좌남수 의장은 "선언적으로 특정 행위유형을 구체화하는 조례이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의원들 스스로 사전예방과 자율규제에 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선언적 의미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좌 의장은 "문제가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절차에 따라) 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로 활용해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혁신 1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의원이 먼저고,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의회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선임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7월 3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강성민 의원을, 부위원장에 고은실 의원을 선임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될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는 이날 의장 추천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강성민·박호형·송영훈 의원, 정의당 고은실 의원, 무소속 양병우 의원, 민생당 한영진 의원, 오대익 교육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및 영향 발생 영역별 현안 간담회와 정책대안 발굴 관련 특별강연·토론회를 개최하고, 광범위한 사례조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혁신 뉴노멀(New Normal)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제주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정책 전략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공항갈등해소특위, '갈등해소 추진계획' 가결 제10차 회의 열어 추진 계획 채택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위는 특위가 마련한 갈등해소 추진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비협조로 지난달 30일 한 차례 심사 보류했으나 8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 10차 회의에서 제2공항갈등해소를 위한 추진 계획을 채택했다.

제2공항 갈등해소 추진계획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제2공항갈등해소특위는 1단계로 공론조사, 심층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도민여론수렴 대안 중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에 돌입한다.

이후 2단계는 제2공항갈등해소특위 활동 방안 제시 및 향후 진행 방법에 대해 제2공항 찬반 단체 및 국토부와 함께 논의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갈등해소 추진계획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 자문, 도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해 9월 중 추진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출석한 이상헌 제주도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2공항 갈등해소 추진계획에 비협조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제주도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도민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공식적인 간담회를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제주4·3특별법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만구)는 7월 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오영훈, 위성곤,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 6월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가 전체적인 법안의 개정 방향을 설명한다.

토론자로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

김성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개정특위위원장,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 전문위원,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교사,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법률(초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7개의 장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나온 세부 의견을 반영해 21대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국회 토론회에



서 논의 됐던 4·3 희생자의 명예회복 국가의 배·보상,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을 토대로 법안에 포함될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결의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28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무소속)가 제안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9명(전체 43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건설·고용 등의 지표 부진이 계속되면서 제주경제의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매판매지수, 고용률 등의 지

표는 집단 감염이 확산된 대구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사증 입국제도도 18년 만에 중단돼 줄어든 관광객 수가 언제 회복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제주의 경제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제주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조만간 해당 결의안을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도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하반기 의정활동 스타트 감사위원회 등 기관방문을 통해 현안사항 청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84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7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소(감사위원회, 4·3평화재단, 제주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를 방문하여 현안사항 청취

및 주요관심사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11대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감사위원회 현장방문에서 광역쓰레기 처리장 문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문제, 행정시 감사, 감사위원회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4·3평화재단 현장방문에서는 “4·3영령을 추모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하여 재단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이어 위원들은 4·3트라우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코로나 19로 인한 4·3 교육사업의 비대면 방식을 통해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연구원 현장방문에서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제주현안에 대한 연구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진행과정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도민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평생교육진흥원 리모델링에 따른 진행상황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민간교육시장과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해줄 것으로 당부하였고, 또한 장애와 인권에 대한 교육체계를 완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11대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원들의 현장감각과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였고, 향후에도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비 현장방문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등 5개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앞서 7월 17일 사전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이상봉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은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동흥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부지 등 총 5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38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도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의결 전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지 및 건물의 적합성 판단, 인근지역과의 관계성 파악 등 면밀한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 추진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공유재산 매입의 건이 회기마다 상정되는데,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막상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도민의 세



금으로 매입하는 것인 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하반기 의정활동은 현장의 소리 청취부터 소관 사업소 및 재해예방 정비공사 현장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제3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7월 1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업소(설문대여성문화센터, 보훈청, 자치경찰단)를 방문, 현안사항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제11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하반기 의정활동을 현장의 소리 듣기로 시작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써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하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폐회중이지만 현장방문을 상임위원회 첫 일정으로 잡

았다.”고 밝혔다.

양영식 위원장은 “도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고 복지·치안·소방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을 시작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7일에는 제주시에 있는 재해예방정비공사 현장 3곳을 방문해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힐링 추진 코로나블루의 사회적 위기 진단 전문가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에서는 7월 6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승아·강성민 의원실과 송재호 국회의원실 공동주관으로 <코로나블루의 사회적 위기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위해 참여한 고도원 이사장(아침편지 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무기력해지고 우울감(Blue)을 겪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 부른다. 코로나19로 시작된 강제 멈춤의 시간·불안과 우울·무기력·고립감으로 인해 마음이 피폐해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고통스런 시간이 되어버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힐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

민과 국민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관광 활성화를 이야기했다.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한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은 ‘신체와 정신이 힐링되는 제주 만들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강화되는 심리지원’, ‘개인이 아닌 사회와 공공이 책임지는 심리방역체계’, ‘자연환경과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모델 구축’, ‘선언적 계획이 아닌 실행되는 계획을 통한 도민안전 확보’등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승아 의원은 “꽃자왈에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는 풍혈(숨구멍)이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민과 국민의 심리안전을 위한 풍혈(숨구멍)로서 제주를 만들어가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힐링이 제주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

음식물처리시설 입찰, 절차진행 과정서 보완해야 색달동 광역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확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7월 17일 색달동 광역음식물류 처리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이번 입찰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기에 현행 절차 진행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재공모시 1순위 업체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1:2:3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업만 늦어져 음식물 쓰레기 처리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담당 과장과 팀장의 부재와 환경국장의 공로연수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아 관련 업무의 공백도 우려된다. 제주도는 구좌읍 동북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순환센터 선별시설 운영권을 놓고 동북리 주민들과 협상이 시급하지만 책임지고 협상에 나설 담당자는 없어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를 받고 있다.



토평동 공동주택현장 방문, 배수문제 지적



환경도시위원회는 7월 17일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했다. 공동주택 조성사업은 사업면적 23,968m²에 건축면적 4,741.80m²에 15,998.93m²의 연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13개동 176세대를 짓는데 2021년까지 4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날 방문은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이 도의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심사에 앞서 이뤄졌다. 아무개 주택조합 이사가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지가 주변보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빗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 진입로가 한 개밖에 없어서 주변에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은 간단히 질의하는 자리이다.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의 참석 인원이 적은 것을 보니 소통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배수문제가 제일 심각할 것 같다”라며 “물길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저류조를 만든다 하더라도 폭우시에는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우려의 말을 했다. 이어 “출입구도 하나뿐이라 세대수가 많아 교통혼잡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며 덧붙였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 전시관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7월 17일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 전시관 건립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했다.

설문대할망 전시관 건립사업은 2011년 9월 1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하여 2016년 4월 29일에 건설공사 착공 후 현재 공정률 60%가 진행된 상태이다. 총 사업비 908억원이 투입되었고 현재, 건축공사 및 부대 시설은 완료되어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작업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현장에서 이학승 돌문화관리소장은 “환경의 가

치를 최우선하여 향토성과 예술성을 살린 돌문화공원을 세계가 찾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은 “현재 제주의 로컬색채를 잘 담아내고 있으며 하드웨어적인 면은 최고”라고 전제한 후 “이에 덧붙여 소프트웨어적인 제주문화를 가미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제주의 귀한 보물을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하며 느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역 콘텐츠 기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7월 13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이 강력히 시행되고 있다. 그로인해 문화행사, 축제 등 대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행사들이 취소, 축소, 연기 되고 있고, 진행하더라도 30인 이내, 비대면-온라인 사업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마을 미디어 운영자들이 몇몇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마을 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도 활발한 마을미디어 운영으로 확대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지난해 강민숙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미디어 실무협의회의 근거를 담아 활성화 방안과 운영자들 간의 운영에 따른 애로점과 정책방향을 논의해 왔다.

강민숙 의원은 “최근 SNS와 유튜브, 온라인신문 등을 이용한 다양한 소통 방식 속에 마을 공동체미디어 사업 역시 지역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영상문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또한 “도내의 공동체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그 매개로서 도내 생활문화 현장을 전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산업계 눈높이 현장소리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문화산업 회복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7월 30일 의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강력히 시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문화행사, 축제 등 대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행사들이 취소, 축소, 연기 등으로 지역문화예술계의 피해는 물론 관련 인쇄, 기획, 마이스, 식당,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피해가 파동되고 있다.

이번 제2추경 지출조정계획에서도 모든 행사 사업비 취소를 전제로 강력한 예산삭감을 통해 경제방역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예산이 재조정 되었다.

그 결과 이번 추경에서 문화행사 일부 몇 건 빼고는 축제, 체육행사 등 문화대행업들이 연관된 사업비들은 전액 감액된 상황이다. 의회 조정 증액 역시 규모 있는 축제, 체육행사 등 비대면 등을 요구하며 소규모 증액에 그쳤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지출구조조정, 농업재해 예방사업 예산까지 깎아서야
제2회 추경안 심사서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회 추경예산안 재원확보를 위해 농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 제주도의회

추경안 심사 도마위에 올랐다.

7월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제1차 회의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농업재해예방사업이 20%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도본청의 ▷경지정리지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10억원)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20억원) ▷농업용수 저수조 개보수사업(10억원) 등 농업재해예방 정비사업 예산이 당초 40억원에서 32억원으로 8억원(20%)이 감액됐다.

또한 양 행정시의 농업재해예방 정비사업도 최소 2%

에서 최대 22%까지 감액 편성됐다.

때문에 재해예방이라는 사업목적은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의원들은 "제주에는 태풍의 길목에 있어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한 부분을 질타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할 예산들이 있어서 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형 뉴딜 정책 적극 발굴 필요하다”

제주도 긴급현안 업무보고서 제기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8월 5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수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으로부터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분야별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도내 5인 미만 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80%를 넘고 있는데 (5인 미만 기업은) 통지도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다”며 “정부 기조를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제주만 갖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 있어 제주형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가 제출한 뉴딜 사업 내용을 보면 미래전략국에서 추진하려고 기획했던 사업들을 포장해 조금

바꾼 것 같다”며 “미래전략국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제주형 뉴딜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부서 간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실국에서 제주 지역에 맞는 뉴딜 사업을 빠르게 발굴하고,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제주도는 이미 탄소없는 섬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 왔고,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을 도민과 함께 만들고, 청정과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 실행해 왔다”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에 큰 탄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더큰내일센터 현장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7월 13일 제주더큰내일센터(센터장 김종현) 등 소관 기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공유했다.

교육위원회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지 현장방문

진행상황 점검 및 의견청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7월 20일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지인 구 삼양초회천분교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11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첫 현장방문으로 총 사업비 180억원이 투입되는 유아체험교육원의 설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업

으로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삼양초등학교 옛 회천분교 일대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건축물과 실외놀이시설, 주변 새미 숲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유아체험 공간으로서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공남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제주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뛰놀며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생기는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말하면서, 이번 현장 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유아체험교육



원 건립 진행과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 ‘업’

김창식 의원, 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교육의원(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0년 7월 7일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창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의 선정, 과제담당관의 지정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

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나.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다. 정책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의 지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라.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를 신설함(안 제12조의2)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을 정비하였다. 또한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과제담당관 지정을 명문화하였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에 의미를 둔다고 하였다.

생생 의정활동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

강철남 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사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8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 있어야

김황국 의원,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조례안은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시행을 앞두고 따라 기존 '청년 기본 조례'를

일본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소모품처럼 노역에 시달린 분들이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제주지역강제동원노동자 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도와 협의해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을 설치, 이들의 실상을 알리고자 했지만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

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러한 기념물이 설치 이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통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제주의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균 의원의 공동발의와 강철남·고현수·고은실·김경미·문경운·홍명환·김장영 등 7명 의원의 찬성발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20일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청년당사자들이 참여한 '제10회

청년정담회'를 개최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김황국 의원은 “지난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1,473개 법률 가운데 청년에 관한 종합 법률로서 처음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주와 같은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한 중·단기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리 강화

김희현 의원, 도교육감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 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

무의 공정성과 합리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고, 수탁기관심사 선정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위법 해촉사유를 규정하여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였고, 수탁기관 감독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희현 의원은 “민간위탁 재계약 시에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 견제 기

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 사항들을 반영함으로써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재계약 또는 재위탁시 7년 주기로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타 시도와 제주도정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3년 주기로 조정하는 의견들이 교육위원회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문화 전승, 보존, 계승 계기로 바다를 더 가깝게

송창권 의원,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

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이 사회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역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다. 예산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으로 구성하고 있다. 참고로

조례 시행일은 상위법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2021년 2월 19일이다.

또한, 송창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도가 해양·해양수산자원·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교육이 추진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한층 더 가깝게 바다를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예로부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선인들이 창조한 정신적·물질적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의 해양문화를 도민들이 전승·보존·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양영식 위원장)·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고은실 의원(정의당)은 7월 9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소속 대안교육기관,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도내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제주대안교육협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내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을 다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고, 도와 도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본 간담회를 주최한 김경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서는 평등에 기초한 권리를 말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은 무상교육인데, 대안교육기관은 무상교육이 아니다. 이것은 차별이고 당연한 권리가 박탈된 것인 만큼, 논의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



해줄 것인가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비 및 지역현안 해결 위한 이례적 통큰 행보 좌남수 의장, 정부청사 방문해 국비지원 확대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에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이틀동안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소관 실·국장, 과장, 실무자까지 직접 대면하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 소통을 펼치며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도민의 열망과 의지를 피력했다.

전국적으로 광역·기초의회 의장이 국비절충에 나

선 것은 이례적이며, 도민사회의 위기 극복 및 도민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한 대전제 하에 의회와 도정과의 협치를 추구한 점에도 큰 주목을 이끈다.

이번 방문은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시기 마무리(기재부에서 국회 제출)가 9월 2일인 점을 감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세수감소 등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짐에 따라 내실있는 국비확보를 통해 제주의 핵심사업 발굴과 현안해결에 대응해 나가고자 하였다.

주요 절충내역을 보면,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 구축사업(55억, 지역예산과), △제주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사업(5억, 고용환경예산과), △조천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5억, 고용환경예산과), △버스 전용차로 시설사업(46.5억, 국토교통예산과), △발작물 토양생태 환경 보전사업(43.2억, 농림해양

예산과) 등 총9개 사업·393억원에 대하여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그 외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어,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한국관 뉴딜정책에 연계하여 도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뉴딜정책 사업 발굴에 집중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였다.

좌남수 의장은 “도의회에서도 제주의 재정확충과 도민 현안 해결을 위해 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관 뉴딜정책 발표에 따른 제주형 뉴딜정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유념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대규모 사업발굴 및 추진에 의회와 도정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청년이 행복한 제주’ 임시총회 대표 김경학, 부대표 송영훈 의원 유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청년이 행복한 제주’ 임시총회가 7월 28일 의사당 소동마당에서 열렸다.

임시총회에서 11대 하반기 연구회를 이끌 대표에 김경학 의원, 부대표에 송영훈 의원으로 전반기 임원을 전원 유임하기로 소속 회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2018년 8월 창립한 연구회는 그동안 여러 정책토론회와 사례조사를 통해 오늘날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고, 당사자로서 법률적·제도적 과제를 발굴하는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후반기에도 연구회 대표로서 책임을 맡게 된 김경학 의원은 “여러 소속 회원들과 청년당사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함께 전반기 연구회의 성과를 이어 청년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현실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김경학 대표 및 송영훈 부대표(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와 함께 연구회에서 활동할 의원은 강성균(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예월읍),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김황국(미래통합당,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김희현(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부공남(미래제주, 제주시 동부) 등 제11대 도의회의원 7명이다.

의원연구모임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정기총회 후반기 신임 대표 송창권, 부대표 문경운 의원 선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모임 ‘해양산업발전포럼’은 7월 28일 제주도의회 의원 휴게실에서 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에 송창권 의원을, 부대표에 문경운 의원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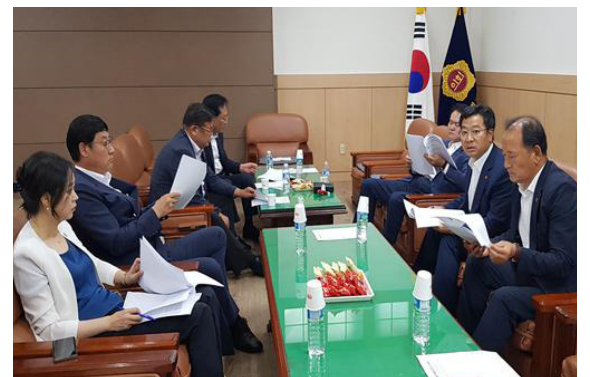
이어 회칙 제정, 연구사업 계획 승인 등의 안건을 소속 회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의 해양에서 차지하는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 하여 한·중·일 연안국의 공유하는 동중국해 및 남북평화 협력이 급변하는 시대에 국·내외 해양정책 및 전략 연구 활동을 통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 10대 의회때 창립(좌남수 대표의원)되어 운영하여 왔다.

현재, 포럼 회원은 송창권 대표, 문경운 부대표와 함께 강시백(교육위원), 강연호(미래통합당), 고용호(더불어민주당), 김희현(더불어민주당), 문경운(더불어민주당), 박원철(더불어민주당), 좌남수(더불어민주당), 안창남(무소속), 이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제11대 도의회의원 10명이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

신임 송창권 대표는 “제주도민의 해양주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형 의원연구모임으로 이끌어 나



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향후 급변하는 해양관련 해양경제생태계 구축 및 제주형 뉴딜 활성화 방안 등 제주관련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조례는 함께 제정되어야 한다. 학교교육활동 보호 관련 도내 초·중·고 교원 157명 설문조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간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2012년 6월 제정되어 8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도내 초·중·고 교원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17%만이 해당 조례를 인지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67%가 현 조례에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 21%가 교권과 학생인권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고 답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 사실 자체도 25%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학교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제정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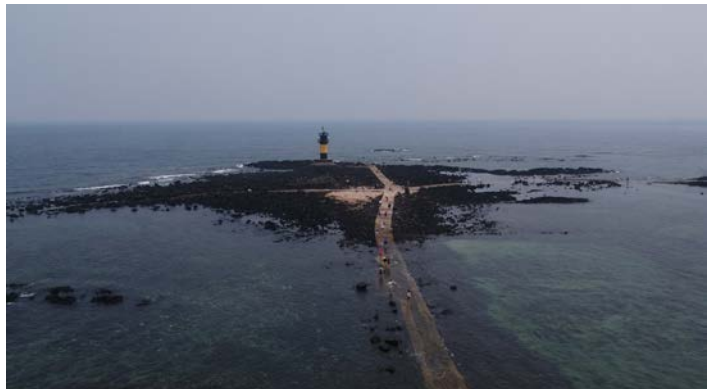
할 조례에 대해서는 46.5%가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조례를, 34.4%가 교권·학생인권·학부모관련 조례를 함께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으로는 56.1%가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위한 방향, 33.1%가 학생인권신장과 책임의 조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학생 531명을 포함하여 총 1,002명의 서명으로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청원에 따라, 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권조례와 학부모 교육활동 조례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교육 3주체의 교육활동을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나섰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고은실 의원은 “청원을 추진한 제주학생인권조례TF와 교육청 실·국·과장과의 좌담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눈 바가 있었고, 교직원단체 대표와 학부모회대표 및 학생회장대표 등이 함께 조례 제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사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요구를 수용하여 급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교육주체간의 권리와 활동이 조화될 수 있도록 3개의 조례를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도민 사회의 화합의 결과물이 될 것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시로 읽는 제주



차표

장이지

동백꽃의 붉음 백 개에
달의 뒷면까지 갈 수 있습니다.

덧새들의 기침 소리 스무 개에
토성의 고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바람의 일곱 가지 음색을 구분하면
천왕성 언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왼쪽 발바닥의 까만 점 하나를 잃어서
나는 조금 기가 죽었지만…….

일요일의 날빛이 쏟아지면
먼 곳까지 가서 놀다가
어머니의 깨진 새끼손톱으로 돌아옵니다.

차표라는 시를 처음 읽었을 때에는 이 시가 4·3 시라고 생각했다. 장이지 시인은 새롭 게 4·3시를 쓰려고 노력하는 구나, 지명에 갇힌 시를 쓰지 않으려 노력한다더니, 이제는 아주 우주까지 확장이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만나 시를 잘 읽었다하니, ‘차표’는 4·3 시로 쓴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단 동백꽃만 나오면 무조건 4·3시라고 생각하게 된다. 시야 읽는 사람 마음으로 읽으면 되지만 그럼 ‘차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사람이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달의 뒷면까지 가져온 것일까. 나는 시를 읽으며 떠오르는 추억의 기 침 소리를 따라 멀리 가 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내 앞을 달리던 하얀 다마스 차량이 떠올랐다. 차량 뒤에 동학유통이라고 쓰 여 있었다. ‘동학유통’이라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에 있는 이 가게는 식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검색이 되었다. 이름을 왜 동학이라고 지었을까. 그 까닭이 역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흑여 농민항쟁을 이름으로 단 유통회사는 어떤 가치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 을지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곧 ‘동학’이라는 기침소리는 사라지고 다정했던 외사촌오빠 가 떠올랐다. 까닭은 다마스에서 호떡장사를 했었기 때문이다.

외사촌 오빠는 군산 어딘가에서 살다가 귀향을 했는데, 내려와서는 중고 다마스를 개 조해 호떡장사를 시작했다. 그 지역에서 유일한 호떡집이었기에 장사가 엄청 잘 되었다. 혼자 장사를 하다 손이 필요해 당시에는 별거 중이던 아내까지 내려와 살림을 다시 시작 할 정도였다. 어른들은 두 부부가 그 시골마을의 돈을 다 쓸어 모은다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다마스가 세워진 호떡가게를 지나면 마음이 든든해졌다. 하지만 군산에서 귀향을 할 때에도 도박 때문에 내려온 것이었는데, 호떡장사가 잘 돼서 자리가 잡혀가니 사촌오 빠는 다시 노름을 하기 시작했다. 경마장이었다.

어느 순간 호떡가게는 사라졌다. 아내도 아이 두 명을 모두 외사촌오빠에게 맡기고 고 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도박에 중독 된 사람들 끝이 그렇듯 외사촌오빠는 이후로도 일을 잘 하다가도 다시 나락에 빠지고 잘 하다가도 나락에 빠지고 그랬다.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살았을 때는 엄마는 사촌오빠에게 박거리 집을 내주었 다. 그 곳에서 다시 재기를 꿈꾸다 무너지고, 재기를 꿈꾸다 무너졌다. 새 올케언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혈을 살다가기도 하고, 몇 달을 살다가기도 했다. 언제인가 검은 봉다 리에 얼굴을 묻고 우영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후로 엄마는 냉정하게 외사촌오빠를 집 에서 내보냈다. 뱃사람이 된 오빠는 자꾸 검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 집을 떠난 후로는 잘 만날 수 없었지만 작은 도시에서 우연히 저 만치서 걸어오는 오빠가 보이면 왜인지 무척 반갑다가도 너무 무섭고 너무 멀어 보였다. 오랫동안 명절에도 오지 않는 외사촌오빠는 지금 손이 한참 넘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길에서 우연히 만나 반가워 손을 잡으면 왜인 지 ‘손톱들이 다 깨져 있을 것만 같다.

글 김신숙/시인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기	주요처리안건
계	11회	총118일	정례회 2회/41일, 임시회 9회/77일
3월	제380회 임시회	3.17.(화) ~3.24.(화) (8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감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81회 임시회	4.16.(목) ~4.29.(수) (10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82회 임시회	5.14.(목) ~5.21.(목) (8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6.15.(월) ~6.25.(목) (11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84회 임시회	7. 1.(수) ~7. 3.(금) (3일)	· 하반기 원구성
	제385회 임시회	7. 16(목) ~7. 28.(화) (13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8월	제385회 임시회	8.10.(월) (1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9월	제387회 임시회	9.16.(수) ~9.22.(화) (7일)	· 주요 업무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88회 임시회	10.13.(화) ~10.29.(목) (17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389회 제2차 정례회	11.16.(월) ~12.15.(화) (30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1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390회 임시회	12.17.(목) ~12.23.(수) (7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청탁금지법 Q&A



Q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조문 중 ‘공개적으로’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SNS 등에 ‘특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명시해놓고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을 하는 경우도 해당하나요?
A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됩니다. SNS에 게시함으로써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5조제2항 제2호)로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것은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와 별도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복지기준선 수립의 의미와 과제



2019년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의 과제 수행을 통하여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 즉, 복지기준선이 수립되었다.

2012년 서울을 기점으로 13개 광역단체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제주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는 제주에도 도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의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향후 복지 기준선을 좌표 삼아 제주의 복지수준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제주복지기준선의 선언적 의미를 요약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도민이(보편성) 공동체가 발전시켜 온 사회·환경·문화적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시민권 차원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도록(사회적 권리)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고유성), 도민 모

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목표지향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실현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복지서비스, 건강, 교육, 고용, 주거, 여가문화, 환경, 소득, 안전 등 총 9개 영역으로 설정되었고 각 영역별로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복지기준선 수립은 법적 실행 근거가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 복지현황에 대한 세밀한 진단과 분석 결과에 근거한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완성되어 추진되면, 5년여 후 2024년이 되었을 때에 도민이 생활수준이나 제주의 사회보장수준에 대하여 기대수준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복지기준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복지재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제주의 재정상황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데다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요인에 따른 취약대상

자의 증가로 점진적인 사회보장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며, 합리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다만, 중복사업 조정, 합리적 수준의 예산 책정,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 등이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영역이 도민의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도민에게 전달되는 상당수의 사회복지 제도와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고 합리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필요하면 제도와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수준으로 행정 전단계계의 효율적인, 혁신적인 개편이 요구되어진다.

고은실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청렴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신뢰 구축 수단으로써 과거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조해 왔다. 고객만족책임제, 청렴 행정만족도 모니터링제, 인사고과 반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자치도는 최하위 5등급이라는 실망스런 결과를 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각종 위원회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고

객 평가까지 모든 세부항목에서 4~5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과거 일부 비리 사건의 영향으로 손해를 봤다 작은 잘못을 언론에서 너무 부풀린다 실제로는 제주도가 제일 청렴한데 도민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 등 아직까지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를 접하고 실망한 공직자들의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냉철함이 필요한 때다. 도민사회부터 공직 내부까지 청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실망이 아니라 반성이다. 실망과 조급함을 버리고 공직자 모두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주자치도만의, 그리고 높은 수준의 청렴문

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처음 공직에 입문할 때 되뇌었던 공무원의 신조를 되새기고, 웃으며 민원인을 안내해야 한다.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더 세심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도민과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올린 진심은 결국 도민사회에 당겨 될 것이다.

최은정 주무관
/ 대천동 주민센터

서울 이어 경기, 강원도의회까지 '제주 4·3 특별법' 개정 한 목소리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까지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규모의 민간

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건의안은 9월에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지난 3일 29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 역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강원도의회 등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속속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회 회장 등과 간담회



8월 7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회장 등이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마을의 발전방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강희봉 회장 등 강정마을회 운영위원은 제주도의회를 찾아 좌남수 의장 등을 면담하고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갈라졌던 마을 공동체가 최근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도의회에서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를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과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국비 등 9600억 원 규모로 추진중이다.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 만나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실에서 좌남수 의장과 천막촌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민구 부의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박원철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18년부터 제2공항 추진에 반대하는 성상을 주민이 단식 농성을 하며 처음으로 천막을 설치했고, 이후 각종 단체와 시민 등이 줄지어 천막을 치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라도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제 11 대 후반기 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2020년 8월 1일자로 제주대학교 양영철 교수를 도의회 입법고문으로, 고창후 변호사와 손지현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영철 교수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건국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제주대학교 학생처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제11대 의회 전반기에도 입법고문으로 활동하였고, 하반기 의회에서 재위촉되었다.

신임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고창후 변호사는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고창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임 법률고문 손지현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제주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판위원회 위원, 제주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법률사무소 이도의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정책 면담 추진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 공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더불어 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한 행보로 7월 10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정책 면담을 가졌다.

이날 정책 면담에는 민주노총제주본부 측에서는 김덕중 본부장, 부장원 정책기획국장,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문도선 본부장, 양석운 교통약자지원센터지회장, 서비스연맹제주본부 서승환 위원장, 양영진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민구 부의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함께 배석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제주지역 노동현안으로, “제주자치도 민간위탁 중단 및 직접 고용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며, 좌

남수 의장은 “민간위탁은 공공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민간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이기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 안정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동의하며, 제주자치도는 일부 민간위탁 사업을 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수행하고자 함에 따라” 시설공단 설립 조례 “의 본회의 상정 및 가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시설공단 설립 조례)의 처리 여부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언론에 밝힌 바 있으며, 추후 의원총회 개최 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조례 가결에 동참한 만큼 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전문위원회에 김인성 정책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급 상당 행정자치전문위원회에 김인성(43) 직전 행정자치정책연구위원을 발탁했

다. 제주도의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행정자치전문위원회에 공개모집을 통해 김인성 정책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최초 임기는 2년이다.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철회 촉구 특별성명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7월 31일 오전 11시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특별성명은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관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함에 따라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중국인 무사증제도의 일시 중단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하여, 신라, 롯데 등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고,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의회, 시민사회, 지역 상인회, 관광학계의 부정적인 견해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면세점 1개소가 추가로 신설되는 것은 제주가 처한 현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된 경제 침체 중에 휴가철을 맞아 일말의 희망

을 품고 활로를 모색해 나가던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의 소상공인들이 최근 나타난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또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가 허용됨으로서 제주의 민생 경제를 더 큰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화궤리리아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특허권 갱신 주기인 5년이 되기 전에 폐업한 것을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명분이었던 면세점 특허의 효력이 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오히려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임을 지적하였다.

특별성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면세점은 관광수지 개선과 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명(明)과 지역 소상공 상권 잠식과 교통체증 유발이라는 역효과를 지닌 암(暗)을 필연적으로 동시에 갖고 있음을 명심하여, 기획재정부 제도운영위원회는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의원국외여비’ 전액 삭감 결의

2020년도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7월 21일 제385회 임시회를 개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 구성 결의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경제 상황과 이로 인한 도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회가

먼저 나서서 도민 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장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전체 의원들의 결의를 모아 의원국외여비 전액 삭감 등 의회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